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37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2. 10.

발 의 자 : 정준호 · 김재원 · 권칠승
북기왕 · 이학영 · 김태년
박용갑 · 김태선 · 임호선
윤후덕 · 박희승 · 정성호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견제를 동시에 보장하고 있음.

그러나 체포·언론·집회·결사의 제한 등 계엄의 실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일반적 지휘·감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특별조치에 대한 민주적 견제 장치가 부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임의적으로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특별조치를 공고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통고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해

제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계엄사령관의 자의적인 특별조치를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2항 신설 등).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후단 중 “공고하여야 한다”를 “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고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계엄사령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)	제9조(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)
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· 구금(拘禁) · 압수 · 수색 · 거주 · 이전 · 언론 · 출판 · 집회 · 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 내용을 미리 <u>공고하여야 한다.</u>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고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② 계엄사령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.</u>
<u>② ~ ④</u> (생 략)	<u>③ ~ ⑤</u> (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)